

집값 책임 공방에 중수청 인선… 2주차 국감 정국 달군다

수도권 감사서 부동산 정책 도마
오는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예정
여당 내부 검증 요구도 변수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부동산 정책과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경기도 감사에 더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정책·인사 검증이 함께 이뤄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경찰청, 13일 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잇따라 출석하면서 수도권 현안과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지사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지사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감에서도 비판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4일 열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당 내부의 검증 요구도 변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



2026년도 국정감사 시작일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근에 마련된 피감기관 대기실에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시

중하되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인력·시설 부족과 인사청문 요청 지연을 문제 삼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까지 따질 방침이다.

15일로 예정된 서울시 감사의 핵심 쟁점은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의 책임 소재다. 민주당은 공급 부족을 오시장의 시정과 연결해 정책 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시장은 전임 시정과 중앙정부의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켰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분야 감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검증 대상에 오른다.

이성훈 LH 사장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 국은행 감사에서는 집값·가계부채 억제와 내수 부진·이자 부담 완화 사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취임 후 처음 국감에 출석하는 신현송 한은 총재를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기준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3.00%로 조정한 배경과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3일 진행하는 국세청 감사에서는 체납액 징수 강화의 성과와 세무조사 제도 개편, 과세 공정성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자산 비중 재조정을 미룬 경위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논란이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꾸준히 공단 기금이 추가 부양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서 12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감사에서는 한미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맞물리면 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신청한 다른 외통위 감사위원들은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 거절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상 방미인데도 출국 예정일 직전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측 주장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지지율 내리막 與 김민석호… 민심 회복 과제 국힘, 여당 악재에도 지지율 ‘제자리’

민주당, 李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여권 갈등·인사 실패 등 원인 꼽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로 김민석 당 대표가 선출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정당 지지율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인사 참사, 당 내부 갈등 등으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성과로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을 공약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공약 달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8월 18~2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한 들녘에서 콤바인을 운전하며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

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응답률 10.0%)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무당층이 26%였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 전

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7%)에서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무당층 31%로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권 내 갈등에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와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치러졌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간 네거티브 설전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내부 두 진영 내 갈등이 여권의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보다 낮아
장동혁 대표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청이 부동산 정책, 경제 문제, 인사 정책 등에서 고전하고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당이 계속 내홍을 겪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정당 없음’ 무당(無黨)층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4월 2주에 20%였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에 2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20%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9월 1주에 30%를 기록했다가 10월 2주에 26%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무당층 비율은 25%에서 6월 지선 이후 21%로 하락했다가 최근 10월 2주에 31%까지 상승했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함께 조사하는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비슷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4월 2주차 지지율은 18%였다가 4월 4주에 1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주에 25%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회복을 거듭하며 10월 1주에 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25%(4월 2주차)에서 31%(10월 1주차)까지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넘어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과 민

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좀처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불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외교안보 이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썩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단순히 네거티브 위주의 공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청년, 민생 등 정책 면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거나,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산속농의 관행적 불법 임대차·휴경 등이 드러나도 투기성이 없으면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침을 발표한 것 모두 성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건 강성 우파 행보를 계속하는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우파를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장외 집회나 올림픽공원 시위 등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큰 자리 요구’ 與 강경파 직격

비서실장·법무장관 인선 장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직은 여전히 공석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장은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대로 이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반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김 후보자 반대 여론만을 의식한 게 아

니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강훈식 실장의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인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으나, 이 대통령 스타일상 의사소통이 원활하면서도 중량감 있고, 능력까지 갖춰야 해서 최적의 후보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에 당내 계파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이 대통령은 아직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 역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응이나 당내 계파 간 복잡한 역학 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예진 기자